

## 안보론에 있어 구성주의와 현실주의의 만남

이 근\* · 전재성\*\*

- |                                    |                                       |
|------------------------------------|---------------------------------------|
| I. 머리말                             | 구성주의의 접점                              |
| II.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보완가능성:<br>메타이론적 기초 | IV.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동북아<br>안보의 경험적 연구 가능성 |
| III. 안보이론에 있어서 현실주의와               | V. 맺는말                                |

### ABSTRACT

#### Constructivism and Realism on Security: How they Complement Each other

Constructivism has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most prominent paradig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ith its distinctive theoretical perspective on most fundamental aspec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using concepts such as identity, mutual construction of agent and structure, constructivism has developed various middle-range theories concerning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making,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is article tries to discuss and evaluate constructivist contribution to the issue of national security by exploring how con-

structivism criticizes and complements existing neorealist discussion of national security. Using multi-level approach from the levels of meta-theory, conceptual frameworks, to that of empirical analysis, this article argues that; 1) constructivism offers a better understanding of national security when combined with neorealist analysis; 2) constructivism retains metatheoretical commensurability with classical realism; 3) constructivism elaborates neorealist central concepts such as security dilemma, balance of power, and security institutions. This discussion leads

\* 서울대 국제지역원

\*\*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us to the conclusion that constructivism is useful in the analysis of security environments of South Korea, and also in policy suggestions with regard to lessening security dilemma in inter-Korea

relations, constructing a better balance of power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and promoting intra- and inter-regional cooperation based on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ASEAN and ASEM.

**Key words:** constructivism, realism, security, security dilemma, balance of pow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 I. 머리말

1980년대 후반 등장하여 발전을 계속해 온 구성주의 국제정치학 이론은 애초에는 기존의 이론들에 대한 비판에 주력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독립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구성주의의 성립과 발전을 주도해온 웬트(Alexander Wendt)는 신현실주의의 개별주의적 존재론과 세계체제론의 구조주의적 존재론을 비판하고, 개체와 구조사이의 상호구성성을 강조하는 메타이론적 비판에 주력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성주의를 국제정치이론계의 하나의 일반이론으로 변화시키는데 노력하여 성과를 거두었다.<sup>1)</sup> 국제관계의 기본 분석단위, 행위자의 본질, 국제관계의

- 1) 웬트의 기존이론에 대한 비판은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 no. 3 (1987): 335-370와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 no. 3 (1987): 335-370등에 잘 나타나 있고,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 no. 2 (1994)부터는 구성주의의 일반이론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성과는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에 잘 집약되어 있다. 신옥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 32집 3호 (1998)와 김학노, "합리주의적 기능주의 비판과 구성주의적 대안 모색," 국가전략 제 6권 2호 (여름, 2000)도 참조.

체제적 성격 등에 관해 독자적 관점을 제공하였고, 이를 위해 개체의 정체성, 상호이해에 근거한 개체간 관계변수, 관계변수에 의거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정치조직원리 등, 국제관계의 핵심에 관계된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구성주의 자체에 의한 국제관계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일반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가 보다 많은 연구자를 확보함에 따라 다양한 중범위이론에서의 연구성과도 보여주고 있다. 안보론, 외교정책론, 국제협력이론, 국제제도론 등 국제정치의 중요한 중범위이론에 독특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상적 개념들에 관한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구성주의적 중범위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가설의 개발과, 경험적 연구의 제시를 통해 국제정치의 이해에 공헌하고 있다.<sup>2)</sup>

이 글은 구성주의 안보론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여, 이론적으로 구성주의의 안보론이 기존의 이론들에 의한 안보연구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목적과, 이러한 공헌이 한국의 안보문제에 어떠한 유의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 특히, 안보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성과를 제공해 온 현실주의 패러다임과 구성주의가 어떠한 성격의 접점들을 가지고 만나게 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현실주의는 안보문제에 관계된 다양하고도 중요한 개념들을 제시해 왔으며, 또한 적절한 경험적 연구성과를 내어, 이론적으로뿐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국제관계의 이해에 많은 공헌을 하여왔다. 항시 안보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한국의 학자들도 현실주의의 안보론의 연구성과를 긍정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많이 이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2) 구성주의를 중범위이론 및 세부이론의 차원에서 경험적 연구로 발전시킨 예로는 Audie Klotz, *Norm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truggle against aparthei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와 Martha Finnemore,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socie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Peter J. Katzenstein,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Yosef Lapid and Friedrich V. Kratochwil, eds., *The return of culture and identity in IR theory* (Boulder, Colo.: Lynne Rienner, 1996) 등을 참조.

이 글은 우선 신현실주의의 안보론을 구성주의가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구성주의는 신현실주의의 안보론이 신현실주의의 일반이론적 가정, 혹은 메타이론의 구성요소 때문에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안보론 중에서도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안보딜레마론, 세력균형론, 안보제도론의 분야에서 신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접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구성주의 안보론을 평가하는데 있어 구성주의가 가지는 자유주의적 편향을 비판한다. 구성주의는 본질상 자유주의와 접합될 필연성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은 구성주의를 자유주의적 가치와 접합시키는데 주력하여 왔다.<sup>3)</sup> 이는 국제정치의 분석에서 국가간 권력의 불균형성, 갈등적 관계, 국제제도의 편향성 등을 분석하는데 커다란 장애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 글은 이를 교정하기 위해 고전적 현실주의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한다. 구성주의와 고전적 현실주의의 접점을 살펴보는 논점으로, 앞의 신현실주의-구성주의의 접점과는 다른 두번째의 현실주의-구성주의의 접점을 구성하게 된다.<sup>4)</sup>

이 글은 우선 신현실주의, 구성주의, 고전적 현실주의의 개별적 특성과 차이점, 접합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논하기 위해 메타이론의 측면에서 이들 이론을 논한다. 우선 신현실주의와 고전적 현실주의는 같은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주장하

- 3) 구성주의의 자유주의적 편향을 잘 보여주는 글로는, John Gerard Ruggie, "What Makes the World Hang Together? Neo-Utilitarianism and the Social Constructivist Challe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4 (Autumn, 1998), pp. 855-85.
- 4) 신현실주의와 구별되는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에 관한 글로는, 전재성 "E. H. 카아의 비판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한국정치학회보』 제 34집 3호, (1999)와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메타이론적 검토와 실천지(prudence)의 의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국제지역연구』 제 8권 제2호 (여름, 1999) 등을 참조.

고, 신현실주의와 구성주의 역시 큰 거리가 있음을 보인다. 반면, 고전적 현실주의와 구성주의는 메타이론적 차원에서 상호 보완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결국 신현실주의를 구성주의가 보완하고, 이를 고전적 현실주의의 주요 논점으로 바로잡을 때, 메타이론적으로 가장 완성된 안보론의 논의가 나타날 수 있음을 논한다. 이러한 안보론이 다양한 이론들의 장점만을 평면적으로 취합한 보조가설들의 묶음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기초를 가진 이론이 되기 위해 필요한, 메타이론 차원에서의 상호관계를 논하는 것이 이 절의 목적이라 하겠다.

다음은 안보딜레마론, 세력균형론, 국제제도론의 측면에서 앞의 내용을 분석적 차원에서 구체화한다. 이들 세부이론은 신현실주의와, 부분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가 만들고 발전시킨 개념이지만, 구성주의가 상당 부분 새롭게 이론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한편 구성주의의 논의가 고전적 현실주의에 의해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를 설명이론의 차원에서 논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이상의 개념적 논의가 남북한간 안보딜레마, 동북아 국가들간의 세력균형, 동북아 및 아시아의 국제안보제도의 구체적 사례에서 어떠한 분석적 이점과 실제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분석한다.

## II.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보완가능성: 메타이론적 기초

메타이론이란 이론에 관한 이론으로, 이론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들을 밝혀내는 개념들을 논구한다.<sup>5)</sup> 국제정치 이론들이 패러다임으로 비유되면서 이론들간에 차이점이 얼마나 근본적인가 하는 데에 관심이 증가되면서 이론

5) 국제정치학의 메타이론에 관한 논의로는 Alexander Wendt, "Bridging the theory/meta-theory gap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7(1991)과 Mark Neufeld, "Who's afraid of meta-theory," *Millennium* 23-2(1994) 참조.

들의 메타이론적 구성요소에 대해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과학이론의 메타이론적 요소들로는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실천론 등을 들 수 있다. 이론을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론들 혹은 패러다임들이 가지는 공약성과 불가공약성(incommensurability)의 요소들을 분석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 형성, 발전된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상호간에 불가공약적인 패러다임들로 흔히 이야기되지만, 실제로 메타이론적 구성요소를 보면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드러난다.<sup>6)</sup>

국제정치학 이론들, 혹은 흔히 국제정치학의 주요 패러다임이라 일컬어지는 시각들의 메타이론적 기반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론적 주장들, 혹은 실제적, 경험적 가설들을 중심으로 파악된 분류와는 다른 모습의 분류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정치학 이론들, 혹은 패러다임들을 불가공약적으로 만드는 것이 인식론, 존재론적 메타이론적 요소들의 상이점이나, 실제적 이론화 작업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가설들, 혹은 주장들의 상이점이기도 하지만, 좀더 궁극적으로 이론가들 사고 기저에 깔려 있는 가치론 실천론적 메타이론의 요소들의 차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된다.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콕스(Robert Cox)가 논한 바대로, “이론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그리고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한 이론”이며 소위 국적없는 국제정치학 이론은 존재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칼 만하임도 이를 지식사회학적 측면에서 논한 바 있으며, 이는 E. H. 카야가 국제정치이론의 분류를 논할 때 제시한 논점이기도 하다.<sup>7)</sup> 이론가들은 독특한 가치를 가지는데, 이들 가

6) 쉴코(Shimko)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신현실주의가 고전적 현실주의의 메타이론적 요소들을 버리고, 결국엔 이념적으로 자유주의화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가치론/실천론에서의 신현실주의의 변화를 메타이론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장이다. K. L. Shimko, “Realism, neoliberalism, and American liberalism,” *Review of Politics* 54(1992) 참조.

7) Robert Cox,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10-2 (1981)과 전재성, “E. H. 카야의 비판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참조.

치가 비록 실제적 이론화 작업과 인식론, 존재론적 요소들에 직접적으로 투영되지는 않지만, 다른 가치를 중심으로 삼는 이론가들과의 양립가능성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다수의 가치들을 조정할 수 있는 메타적 가치 혹은 기준, 즉 메타윤리적 기준에 대한 객관적 동의가 있다면 가치들을 조정하고 이에 기반한 보다 화해적인 이론화 작업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메타윤리적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치론적 요소는 과학적 이론화 작업을 저해한다는 실증주의적 이론관이 자리잡음에 따라 가치론적 요소에 대한 관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이 서구 국제정치학계의 일반적 경향이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실증주의적 이론관에 대한 신뢰인데, 국제정치이론에서는 소위 신이론들-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메타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메타이론이 이론가들의 가치에 대한 토론을 주변화함으로써, 실제로는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저해하고, 국제정치이론이 미국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미국의 학문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sup>8)</sup>

메타이론적 요소들에 의해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들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요약될 수 있다. 고전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는 같은 현실주의의 패러다임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상이한 메타이론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인식론에서 신현실주의는 2차 대전 이후의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는데 반해, 고전적 현실주의는 철학적, 역사적 접근방법을 강조하며, 존재론적으로 신현실주의는 개체주의에 입각하여 개별국가의 국력의 소유정도를 주된 변수로 삼는데 반해, 고전적 현실주의는 국가간 상호주관성, 인식의 틀,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더욱이 인식론, 존재론적 요소들의 차이는 실제적 이론화 작업에서 방법론적 차이점을 보여주는 정도에 그치지만, 근거의 가치론적 차이는 주요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 결론의 방향 등에 있어 근본적 차이점을 야기한다. 즉 신현실주의가 미국 국제정치학의 현상유지적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반면, 고전적 현

8) Stanley Hoffmann, *An American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Daedalus* 106, no. 3 (1997) 참조.

실주의는 나름의 가치에 기반하여 현실의 질서를 변혁하려는 비판적 자세를 견지한다. 반면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실증주의 메타이론의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구성주의와 탈근대국제정치이론가들의 공통된 표적이 된다.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실제적 이론화 작업에서는 상이한 가설들을 생산해 내지만 메타이론의 측면에서는 실증주의적 인식론과 개체주의적 존재론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가설들의 근저에서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패권적 질서의 현상유지이다. 양자의 메타이론적 공통점은 최근에 들어 국제정치이론계를 합리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로 양분해 논하는 미국의 시각에서도 드러나는데, 이에 의하면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존재론적 개체주의를 공유하는 유사한 이론이다. 또한 콕스는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모두 문제해결적 이론으로 미국적 입장에서 세계를 관리하는 필요성을 반영한 이론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양자의 가치론적 공통 기반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호프만이 2차대전 이후의 국제정치학 자체가 미국의 사회과학이라는 점을 강조한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

반면 고전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는 근본적인 메타이론적 불가공약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현실주의가 고전적 현실주의로부터 물려받은 몇몇 가정들, 예를 들어 분석수준에서 국가의 중심성, 권력과 이익 개념의 강조, 폭력과 갈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 등으로 가려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방법론과 가치론적 정향이 다르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전적 현실주의와 구성주의는 이와는 달리 인식론, 존재론적 측면에서 양립가능성을 보인다. 특히 존재론적 측면에서 구성주의는 보다 발전된 다양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전적 현실주의가 핵심가정을 유지하면서 보조적 측면에서 보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시한다. 한편, 구성주의는 확실한 가치론 실천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개체의 정체성의 과정적, 역사적 구성은 개체간의 협력과 화해, 질서, 그리고 자유주의가 논하는 바와 같이 협력의 제도화에 공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체들간의 불평등한 권력분포가 강압



적, 지배적 규범으로 정착되어, 개체들간 지배-피지배의 집합적 정체성이 공고화될 수도 있으며, 관계의 제도화는 권력정치의 제도화가 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구성주의는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협력적 규범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현존 국제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작업보다는 현존 질서를 수용하여 협력을 도모하려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구성주의의 필연적 귀결점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구성주의가 미국적, 혹은 자유주의적으로 전유되어 가는 현실을 수정하여 현실주의나 비판이론이 갖는 가치론과의 접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구성주의가 국가간 갈등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여 온 현실주의 전통에 공헌할 수 있는 접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sup>9)</sup>

인식론적, 존재론적 측면에서 마르크스적 구조주의와 비판이론은 현실주의나 구성주의와 차이를 보이지만, 비판적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가치론적 양립가능성이 있다. 이를 논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지만, 비판적 관점에 특히 예민한 전자의 이론들을 연구함으로써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가치론적 실천론적 입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가치들간의 동의를 모색할 수 있는 메타이론적 기준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에서 논한 이론들의 메타이론적 차이점과 공통점은 실제적 이론화 작업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감추어지기도 한다. 메타이론적 차이가 분명한 이론들끼리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묶이려고 하고, 메타이론적 공통점이 있는 이론들이 불가공약적 패러다임으로 대립되기도 한다. 이론가의 가치는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 파악되기도 하지만, 이론가들이 주변화시키고 제외시키는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파악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남북간의

9) 고전적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보완가능성을 국제제도론의 측면에서 논한 글로는, 전재성, “현실주의 국제제도론을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2호 (2000) 과 “미사일기술통제레짐(MTCR)과 미국의 미사일정책: 국제제도론적 분석과 대북정책에 대한 현실적 함의.”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1999) 참조.

표. 메타이론적 요소에 따른 국제정치이론의 분류

	고전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구성주의	마르크스주의적 구조주의 <sup>a)</sup>	비판이론 <sup>b)</sup>
인식론	이해의 방법, 역사적 접근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인식론	실증주의, 혹은 합리주의	실증주의, 혹은 합리주의	이해의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인식론	변증법	변증법, 이해의 방법 등
존재론	개체에 대한 합리주의적 가정을 비판, 개체-구조 관계에 개방적	개체주의	개체주의	개체-구조의 상호적, 사회적 구성관계를 강조	구조주의	구조주의가 우선이나 개체의 구조변혁 능력에 대한 관심도 표명
가치론	이익, 권력 개념을 기반 으로 실천지의 도모를 통해 평화와 평등을 추구, 비판적 이론의 성격	강대국의 문제해결이론	강대국의 문제해결이론	명확한 입장이 부재하나 자유주의적 편향성이 강화됨	계급착취관계의 극복을 위한 방법의 모색, 비판적 이론의 성격	반패권적 역사적 블록의 형성을 통한 기존질서의 극복 모색, 비판적 이론의 성격

a) 세계체제론, 종속이론 등

b) 로버트 콕스와 스티븐 길(Stephen Gill)을 중심으로 한 그림서적 접근 등

경제적 불평등 문제, 혹은 제3세계가 주장하는 평등한 국제정치경제질서 수립 등의 문제를 학문적 논제로 삼기를 명시적으로 유보하는데, 이는 평등의 문제, 혹은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가 자유주의 이론의 중심 가치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10)</sup>

이 글의 다음에서 전개될 안보론에서의 구성주의와 현실주의의 상호보완

성에 대한 논의는 고전적 현실주의와 구성주의가 메타이론적 불가공약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선 기반하고 있다. 오히려 각각의 부족한 메타이론적 요소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처럼 구성주의가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전유될 필연성은 없으며, 오히려 전자의 저발전 분야인 존재론, 후자의 저발전 분야인 가치론, 양자의 저발전 분야인 인식론을 상호간에 보완할 수 있을 때, 실제적 이론화에서의 보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안보론의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구성주의와 현실주의의 실제적, 경험적 차원에서의 상호보완 가능성을 논할 것이다.

### III. 안보이론에 있어서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접점

#### 1. 안보딜레마론

저비스(Robert Jervis)가 말하는 안보딜레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A국이 자국의 안보, 혹은 순수한 방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 예를 들어 군비를 증강시킨다거나, 영토를 확장한다거나, 혹은 동맹을 맺는다거나 하는 노력들이 적대국 B국에게는 방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런 경우, B국 역시 군비증강, 영토의 확보, 동맹관계 결성 등의 방법을 통해 맞대응하게 되고, 결국 A국의 입장에서는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 이전보다 자국의 안보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거나 오히려 자국의 안보상황이 이전보다 열악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두가지 조건이 기반이 되

10) 예컨대 Robert Keohane은 후진국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있다.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6-7.

어 일어나는데, 하나는 국제관계에서 B국이 A국의 의도를 확신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uncertainty), 둘째는 A국의 안보증진 노력이 방어적인지 공격적인지 구별할 방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incomplete defense-offense differentiation). 모든 무기는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방어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맹관계 역시 표면적 약속과는 별도로 공격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방어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저비스는 안보딜레마라고 부른다.

안보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국가들 사이에 딜레마적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주권적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불완전한 정보와 배반, 제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체가 없다. 구조주의적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바,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적 조직원리이다. 둘째, 무정부상태적 조직원리에서 파생되는 인식의 문제로, 상대방의 군비증강 의도가 공격적인지, 수비적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고, 미래에 국제관계가 우호적 관계로 유지될지 적대적으로 변화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의 문제와, 어느 정도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혹은 미래의 의도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은 안보딜레마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sup>11)</sup>

안보딜레마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생각함에 있어 신현실주의, 혹은 구조주의적 현실주의와 구성주의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신현실주의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수를 중시하고, 단위체의 성격과 단위체 간의 관계의 변수를 경시하므로, 안보딜레마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필연적이라 파악하고 딜레마의 궁극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설사 국가간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되어온 역사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단위체의 성격이 같 등을 덜 일으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국가단위의 변수가 국제정치구조의 근본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안보딜레마는 필연적으

11) 이 밖에도 안보딜레마의 강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 무기 체계 자체의 공격과 수비의 구분가능성, 방어력 증진을 위해 사용한 군비의 성격과 양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로 국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현실주의는 공격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로 나뉘기도 하는데, 전자의 경우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팽창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통한 이해증진이 어렵다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국가들이 팽창의 욕구를 가지지 않고 있더라도 평화정착이 어렵다는 보다 비관적인 견해를 보인다. 즉, 비록 팽창의 욕구가 없이 현상유지만 바라는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무정부상태에서 파생되는 조건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안보딜레마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간 상호의존관계가 지속되어온 역사가 있어 자유주의적 시장을 매개로 양국이 평화적 의존관계를 유지해 왔거나, 영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처럼 역사적 동질성에 기반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거나, 혹은 민주주의 상호부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간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정치적 규범을 체화시켜 왔거나 하는 점에 상관없이 국가간 관계가 무정부상태적 조직원리에 기반한 이상, 안보딜레마는 해결될 수 없고, 평시에도 딜레마를 끊임없이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주의적 현실주의의 경우, 안보딜레마의 강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국가간 물질 세력의 분배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력배분구조이다. 국제관계가 양극체제인가, 다극체제인가, 혹은 패권적 단극체제인가가 안보딜레마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구성주의는 신현실주의와는 달리 구조란 단위체간 관계와 단위체의 행위, 혹은 실천(practice)에서 파생되어 생성된 것으로, 구조가 행위자의 행위, 혹은 행위자간의 문화적 관계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비록 국제정치구조가 물질 세력분배구조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 구조가 행위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조를 형성함에 있어 부여된 의미체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주의의 논리를 발전시켜보면, 상호적대적 역사를 가진 강대국들에 의해 형성된 양극체제와, 우호적 역사를 가진 강대국들에 의해 형성된 양극체제는, 같은 무정부상태적 조직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격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웬트는 무정부상태의 개념을 보다 적대적인 흡

스적 무정부상태와 보다 우호적인 로크적 무정부상태로 구분한 바 있다.

국가의 속성과 행위, 그리고 국가간 관계 변수를 중시하여 구조의 생성을 설명하고, 행위자에 대한 구조의 제약의 정도를 설명하는 구성주의는 안보 딜레마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신현실주의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구성주의의 논리를 발전시켜 보면, 양국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우호적으로 발전되어 온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다 할 지라도, 상대방의 군비증강행위에 대해 덜 염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국간의 우호적 관계라는 관계변수가 무정부상태적 구조변수에서 파생되는 딜레마적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의 관계, 혹은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에서 미국의 군비증강은 영국과 캐나다의 안보딜레마적 반응을 야기시키지 않는데, 이는 영국과 캐나다가 미국의 군비증강의도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거나, 미국의 미래의 의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양국간의 역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양국간 규범과 집합적 정체성, 공동기대와 상호이해에 기반한 문화적 관계가 안보딜레마적 상황을 완화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구성주의의 인식은 안보딜레마의 대안제시에 있어서도 신현실주의와 차이점을 가져온다. 즉 구성주의는 상대방에 대한 보다 완전한 정보의 추구나 공격-수비의 구별가능성에 대한 기대, 국제정치의 세력분배구조의 변화와 같은 면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관계를 개선하여 양국간에 존재하는 갈등적 상호관계를 해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확장하여 양국간에 조화적 집합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양국간 관계개선이라는 보다 점진적이고 미시적인 노력으로서, 신현실주의의 정태적인 관점에 비하면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라 보여진다.

국가간 관계개선이 국제정치구조의 안보딜레마적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낙관주의는 고전적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약간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고전적 현실주의는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국가의 성격과 행위라는 단위차원의 변수를 중시하며, 국가간 관계가 구조변수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점에서 구성주의

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즉, 고전적 현실주의는 인간의 정치적 집단이 가질 수 있는 성격을 구명하는 문제를 중시하며, 국제관계의 역사를 강조하여 국가간 발전되어온 관계, 이념적 기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구성주의와 차이를 보이는 점은 국가간 역사적 관계의 진화가 인간의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고전적 현실주의는 왈츠가 비판한 바와 같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변수를 강조하는데(소위 first-image 론), 인간의 이기적, 권력지향적 본성이 인간간 관계, 인간집단이 정치적 속성, 집단간 관계를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고전적 현실주의가 집단간 협조적, 조화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제관계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구성주의의 경우, 관계변수의 강조로 인해, 관계가 인간본성에 구속된다거나, 혹은 인간의 본성과 같은 애매한 변수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성주의가 비판하는 소위 본질주의(essentialism)의 문제이다. 따라서 구성주의는 관계가 역사에 의해 규정될 뿐, 초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본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논점을 거부하고, 관계의 역사적 구성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을 보인다.

고전적 현실주의의 경우, 인간본성이 반드시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역사적 국제관계의 진화과정을 보건대 갈등적 국제관계에 의해 형성된 집합정체성이 조화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집합정체성보다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이라고 파악한다. 즉, 다수의 집합정체성간의 근본성에서 차이를 두는 논의이다. 정체성이 관계와 구조에 의해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 세 변수가 모두 인간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다양한 정체성간에 근본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안보딜레마는 구성주의가 파악하는 것보다는 갈등적 정체성의 관계에 의해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안의 제시에 있어서도, 조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더 근본적인 갈등적 정체성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미국간, 혹은 미국과 캐나다간 역사적으로 조화적 정체성이 형성

되어 있더라도, 주권이라는 구성적 원리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갈등적 정체성이 보다 근본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권적 국가들은 항상 갈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간 관계의 수준보다 더 근본적인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딜레마의 해결은 조화적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갈등적 정체성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병행할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세력균형론

신현실주의는 국가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분석틀로서, 또한 국가의 안보정책을 제시하는 실천적 대안으로서 세력균형의 개념을 중시한다. 월츠는 세력균형론이야말로 국제정치이론에서 가장 합법칙적인 이론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논한 바 있으며, 국가는 세력균형이 파괴되었을 때 이를 복원하고자 하는 대외정책을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2)</sup> 즉, 무정부상태에서 국가는 자력구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의 안보를 도모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제도에 의한 안보는 믿을만 하지 않으므로, 오직 자국의 국력을 증가시켜 타국의 위협에 맞균형을 취할 수 있는 세력균형정책을 취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전략적 계산에 의해 추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적대세력과의 균형이 안전을 보장하는 사실을 중시하여, 잠재적·명시적 적대세력과의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자국의 군비증강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맹의 변경과 강화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신현실주의는 세력균형이 유지될 때, 비로소 국가간 다른 형태의 협력이 가능한 것이라 파악하고, 세력균형이 국제협력, 국제법, 국제제도 등의 작동에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일종의 메타제도라는 주장을 보여주고 있다. 불(Hedley Bull)은 신현실주의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견해로, “일반적 혹은 국지적 세력균형이 존재함으로써, 국제질서가 기반하고 있는 다른 제도들,

12)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pp. 119-128.



즉 외교, 전쟁, 국제법, 강대국들의 관리체제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고 논한다.<sup>13)</sup> 신현실주의는 이러한 세력균형이 국가들의 물질적 국력의 균형에 의해 파악되고 설명된다고 보며, 이를 세력의 분배라고 하는 구조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을 이루려는 행위자의 균형에 대한 개념이 인식적 요인일진대, 다수의 행위자간 균형상태에 대한 합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세력균형을 분석함에 있어, 균형이라는 상호이해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가? 고전적 현실주의자인 모겐소는 세력균형을 물리적 국력의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을 비판하며, 세력균형이 행위자간 합의에 근거한 체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모겐소는 그의 책 『국제정치(Politics among nations)』에서 세력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도덕적, 규범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간의 세력의 균형을 이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세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세력의 균형이 명백히 파괴되어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가능하나 평시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각 국은 자국의 세력과 타국의 세력간의 비교가 항상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정확한 세력의 균형점을 찾지 못한다. 그 결과, 각 국은 충분한 국력의 여분을 축적하기 위해 세력의 균형정책 보다는 세력의 극대화정책을 추구하게 되고, 모든 국가가 세력의 극대화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세력균형은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방전쟁과 세력확장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력균형을 통한 평화의 유지라는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워진다.

모겐소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력의 균형 뿐 아니라, 일종의 도덕적, 규범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세력균형체제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가 그 체제의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공유하고, 그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이를 지켜가려는 도덕적 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

13)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pp. 106-7.

세력균형은 자체내에 파괴의 씨앗을 내포하는 것이다. 모겐소는 이를 세력균형의 불확실성(uncertainty), 비현실성(unreality), 부적합성(inadequacy)라는 말로 요약한다.<sup>14)</sup>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신현실주의가 강조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세력의 문제만으로 협조체제의 성립을 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고전적 현실주의자인 모겐소는 국가간 의식적 합의, 이념, 혹은 집합적 정체성의 요소를 논하고 있는데 이는 구성주의의 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sup>15)</sup> 현실적으로 탈냉전과 더불어 세계체제, 혹은 지역체제는 국제사회적 측면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경제적, 사회적 이슈들에 있어 복합적 상호의존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들의 다양한 거시적 정책을 협조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다. 과거에 존재했던 많은 국제사회들이 지역적으로 획정된 범위 내에서 공동의 종교적, 관습적 요소들에 기반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현재의 국제체제는 물질, 관념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공동의 요소들을 점점 더 많이, 그리고 복잡하게 공유하게 된 것이다. 물론 국제사

14) 모겐소는 비엔나회의에서 성립된 유럽의 회의체제가 기본적으로 세력균형, 혹은 세력배분구조를 적절히 반영한 성공적 사례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중요한 점은 협조체제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국가들 간의 도덕적 합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도덕적 합의야말로 상대방의 의도를 확신할 방법이 없고, 상대방의 세력의 증감을 정확히 판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협조체제를 1차 대전까지 이끌고 간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 A. Knopf, 1948), pp. 204-23. 비엔나체제의 구성주의적 측면에 대해서는 전재성, "19세기 유럽협조체제에 대한 국제제도론적 분석: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제도론의 시각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 15권 2호 (가을/겨울, 1999) 참조.

15) 구성주의자는 아니지만 흥미로운 연구로 리틀은 국제체제에서의 적대적 세력균형(adversarial balance of power)과 친화적 세력균형(associate balance of power)의 개념을 대비하여 세력균형을 단순히 국가이익에 따른 전략적 행위의 정책으로 파악하거나, 다수의 국가간의 전략적 상호행위의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간의 합의에 근거한 일종의 제도로 파악하고 있다. R. Little, "Deconstructing the balance of power: Two traditions of though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5 (1989) 참조.

회적 측면이 증가했다고 해서, 그 국제체제가 평등, 자유, 평화 등과 같은 규범적 측면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공동의 규범과 이익은 상당 부분 강제적으로 이식될 수도 있으며, 지배-종속관계가 제도를 통해 교육, 내면화되고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고전적 현실주의와 구성주의는 세력균형이 국제 정치의 무정부상대적 속성을 극복하고 안정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을 가질 수 있다는 논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력균형이란 신 현실주의에서 파악되는 것처럼, 단순히 전략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합리적 이기주의자로서의 국가의 정책을 설명하거나, 이들 정책들이 만들어내는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에 대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에 의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공유할 때 성립되는 국제사회적 제도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범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세력균형체제를 성립시키고 발전시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범과 정체성을 둘러싼 논의와 정치적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소위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의 문제로 세력균형의 기반이 되는 규범을 여기거나 이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정치적 과정이 물적 세력균형을 이루는 것과 함께 불가결한 과정이라는 점이다. 각 국가들이 자신의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상호인정된 권리의 한계, 지역적 국제사회를 위해 각국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호인정된 의무의 내용 등을 인식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3. 안보제도론

군비증강과 세력균형정책에 의해 안보를 도모하는 정책 이외에, 국가는 안보제도를 형성하여 안보를 도모하고자 한다. 안보제도는 그 형태설계(institutional design)에 따라 세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집단방위제도(collective defense institutions), 집단안보제도(collective security institution), 협력안보제도(cooperative security institution) 등이다. 집

단방위제도는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인 억지효과와 가장 심도있는 군사협력을 제공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가장 구속적이다. 집합행동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항상 정치적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집단안보제도는 구성국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외부의 특정 적국에 대한 군사적 능력을 모으는 것은 아니다. 즉, 집단방위제도 보다는 덜 형식화되고 구속력이 크지 않다. 집단안보는 특정 주적을 상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약하지만 반대세력의 맞균형을 불러일으킨다든지 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집단안보는 정치적으로 구속력이 크지 않은 반면, 보다 유연한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 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협력안보제도는 가장 형식화가 덜된 제도적 형태로서, 정치적 협의와 군사적 협조를 위한 장을 제공한다. 그러나 협력안보는 구성국 중 어느 국가(들), 혹은 외부에 의한 공격에 대해 피해당사국을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협력안보제도는 구체적인 군사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지만 공격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에 관해서는 가장 소극적이다. 협력안보제도의 국내적 효과도 최소이다. 국내적 지지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내적으로 가장 적은 부담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안보제도라 할 수 있다.<sup>16)</sup>

우선 동맹에 관계된 문제로서 국가는 언제 동맹을 형성하고, 어느 나라와 협조하며, 어느 나라에 대항하는가 하는 논점을 들 수 있다. 현실주의는 동맹의 형성과 동맹상대의 선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국가의 이익과 권력, 국제정치의 구조적 요소 등을 중요한 독립변수로 논한다. 즉 무정부상태에서 자력구제의 원칙에 의해 자국의 안보를 도모해야 하는 국가는 이성적, 전략적으로 계산하여 자국에 가장 유리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독자적으로 안보를 추구하는 것보다 동맹을 통해 안보를 추구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많

16) Charles A. Kupchan, "Regionalizing Europe's Security: The Case for a New Mitteleuropa". In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pp. 220-1.

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동맹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자국이 맺은 동맹이 위협이 되는 세력에 대한 맞균형을 보장해 주면 비록 자율성을 훼손 당하더라도 동맹을 결성한다는 것이다. 동맹을 결성하는데 있어 자국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가, 잠재적, 혹은 명시적 적국의 국력은 어느 정도인가, 동맹상대의 국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결국 국가는 합리적 이기주의자이며 근대적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적 조직원리 하에서 자국에 가장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바넷(Michael Barnett)은 구성주의의 입장에서 국가 정체성이라는 요인을 들어 동맹의 형성과, 위협과 적에 대한 규정, 동맹상대의 선정 등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누구를 동맹상대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현실주의는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물질적 측면에서 최대의 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을 가장 중시한다. 즉 전략적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가 동맹상대 선택의 주요 변수인 것이다. 반면 구성주의는 동맹상대를 선정할 때, 정체성의 요소가 작용한다고 본다. 즉 정체성의 모습으로 인해 누가 더 바람직한 동맹상대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소위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의 결과이다. 이는 동맹의 적이 되는 적국과 위협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국가의 정체성의 대립 혹은 차이가 적과 위협의 구성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체성의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두 국가가 적대관계를 가지게 될 지 혹은 우호관계를 가지게 될 지, 그리고 현상유지국가가 될 지, 혹은 현상변경국가가 될 지를 알 수 있다고 바넷은 논한다.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것은 적에 대한 규정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체성과 위협을 구성하는 행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형성된 동맹이 과연 얼마만큼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현실주의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치하는가, 그리고 양국의 권력정치적 관계가 양국 동맹의 지속에 유리하게 작용하는가, 혹은 불리하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시한다. 이와 더불어 구조주의적 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세력배분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구조적 변수도 강조한다. 구성주의는 이익과 권력, 구조 변수에 의한 설명도 중

요하지만, 동맹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얼마만큼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약 양국간 공유된 정체성이 희박해지면 양국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체성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양국이 집합적 정체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이 일종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공동의 사고방식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집합적 정체성이란 양국의 대외정책행위가 일치하는 것 뿐 아니라, 양국의 국내적 모습에도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외적 정체성의 공동체일 뿐 아니라 내적 정체성의 공동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넷은 중동지역의 국제관계를 논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내적 정체성을 가짐으로 인해 양국의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공고해 질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17)</sup>

동맹의 문제에 대한 이상의 예는 구성주의가 동맹론에 있어 보다 명시적인 경험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고, 그 결과 신현실주의 이론적 가정으로 설명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설명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장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맹에 참가하는 참여국간의 관계가 반드시 동맹을 강화시키고 양자의 결속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구성주의의 논의를 따르자면 국가의 이익의 규정은 과

17) 바넷의 논의와 상통하는 것으로 리스-카펜(Risse-Kappen)의 논의를 들 수 있는데, 그는 민주국가들간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냉전이 끝나고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후에 왜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다른 동맹에 비해 왜 보다 긴밀한 결속력을 보여주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민주적 평화이론, 혹은 민주주의상호부전론과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이론을 결합하여 이를 자유주의적 구성주의적 시각(liberal constructivist approach)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즉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민주주의라는 정치문화, 정치규범이 이들 국가들간의 관계의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평화적, 민주적 관계가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Thomas Risse-Kappen, "Collective identity in a democratic community," In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edited by P. J. Katzenstei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참조.

정내재적인데, 변화하고 구성되는 이익의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동맹참가국간의 국력차이가 클 경우에 그러한데, 이러한 경우 양자의 관계는 동맹관계의 지속과 더불어 더욱 의존적으로 변화되고 의존관계가 심화되어 결국 양자의 관계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패권국가로서의 쌍무적 동맹관계를 유지시켜온 냉전기간 동안 미국과 동맹파트너간의 관계가 심화되지만, 악화되어 냉전 종식 이후 동맹관계 지속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동맹관계가 갈등적, 지배-피지배적 집합정체성을 심화시켜 결국 동맹관계의 분열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성주의의 협력지향적 정체성 형성이라는, 구성주의에 필연적이지 않은 보조적 가설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sup>18)</sup>

집단안보제도에 있어 구성주의는 여기에 참여하는 개별국가의 이익이나, 집단안보를 성립시키고 발전시키는 강대국의 권력만을 강조하는 신현실주의와는 달리, 집단안보를 가능케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서 집단적 정체성을 논한다. 쿽찬은 안보제도가 세력분포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공유될 수 있는 규범과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투명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국제체제의 경쟁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안보제도 형성에

18) 이러한 논점을 심화시키는 흥미로운 연구로 레이크(Lake)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레이크는 강대국과 약소국간 동맹관계가 지속되면서, 지배-피지배의 정체성이 심화되는 기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안보관계에 있어서 무정부상태와 위계상태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잉여통제력(residual control)”의 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중시한다. 동맹 계약 자체는 체결 당시 예상가능한 모든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나, 예상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계약관계가 지속되면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안에 대한 양국관계가 생겨나고 지속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 잉여의 영역이 문제시되는데, 잉여영역의 통제력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양국간의 세력관계가 과정을 통해 변화하면서 양국간의 관계는 순수한 계약관계를 넘어서는 관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은 동맹관계에 내재적인 이익관계의 구성과 규범의 변화가 참여국의 갈등적 집합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David A. Lake, “Anarchy, Hierarchy, and the Varie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0, no. 1 (1996): 1-33. 참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의 성격 또한 전쟁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도발적 국가가 있는 반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강대국도 있다는 것이다. 쿱찬은 제도와 규범, 정체성과 같은 구성주의적 개념들로 집단안보제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19)</sup>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이 집단안보제도 형성에 필수적이고, 이에 선행해야 한다는 논의는 협력안보제도에 관한 구성주의자들의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협력안보의 주요 구성요소인 군축레짐의 예를 들어 에이리와 수크만(Eyre and Suchman)은 무기확산통제에 관계된 예로 통상무기확산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신현실주의가 통상무기의 확산을 설명함에 있어 강대국의 힘을 강조하거나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구성주의의 입장을 취하여 통상무기확산과 관련된 규범과 지위의 역할, 세계적 정치 사회제도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현실주의는 강대국의 힘을 강조하여 통상무기 확산이 강대국의 결정과 지정학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역적 분쟁 당사국의 국가적 필요나 국내정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소간의 세계전략의 차원에서 결정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구성주의적 설명은 이와는 달리 통상무기, 특히 최신 통상무기의 확산은 기술적 능력과 국가안보에 기초하여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관한 매우 상징적이고 규범적 이유 때문에 채택된다는 것이다. 즉, 무기가 상징적으로 가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와 관계된 것으로, 기술적으로 진보된 무기와 군사력은 그 국가의 근대성, 효율성, 독립성을 상징하며, 개별국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규범구조를 따라 자국의 위신과 평판을 높이기 위하여 무기체계를 현대화한다는 것이다. 프라이스와 타넨왈드(Price and Tannenwald) 역시 협력안보제도의 문제로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사용금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정치에서 억지(deterrence)가 어떻게 가능해 왔는가 하는 문제와, 핵무기와 화학무기에 대한 사용이 왜 억제되어왔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한다. 이들은 억지와 핵무기 화학무기의 사용회피가 단순히 국가이익에 기초한 신현실주

19) Kupchan, 앞의 글, p. 217.



의의 설명만으로 이해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들과 관계되어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 규범체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현실주의는 억지가 일어나는 이유가 보복을 두려워해서이며 합리적으로 국가이익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국가는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복의 위협이 미소함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우위를 가져다줄 핵무기 혹은 화학무기를 사용하기를 회피한 역사적 사례들을 볼 때 신현실주의적 설명은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핵무기와 화학무기의 사용회피와 확산의 금지가 억지와 무기의 효과에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 규범체계의 영향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핵무기에 관해서 보자면 미국 국내의 규범체계가 국제적으로 확산된 것을 알 수 있고, 화학무기의 경우 국제적으로 구성된 화학무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국가차원으로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문명국가”는 핵무기 및 화학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범이 확산된 것이며, 이를 관리할 국제사회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소위 “자기제한의 터부”이다.

#### IV.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동북아 안보의 경험적 연구 가능성

##### 1. 남북한간 안보 딜레마와 신뢰구축조치 (CBM)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안보 딜레마에 관한 현실주의 이론의 논리적 전개는 매우 독특한 암묵적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가정은 간단히 말하자면 국가들은 완전한 주권체이고 이들은 팽창적이고 공격적이기보다는 자신의 안보를 위해 방어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권력중립적”인 국가들이다.<sup>20)</sup> 따라서 방어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들이 어떻게 방어적인 다

20) 국가가 애초부터 방어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구조주의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신현실주의에서 무정부상태(anarchy)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안보딜

른 주권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자국의 안보마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안보딜레마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보 딜레마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슴사냥게임과 수인의 딜레마게임을 원용하는 것도 권력중립적인 주권국가의 가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게임을 하는 행위자는 완전히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팽창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sup>21)</sup>

하지만 이러한 안보딜레마 이론의 숨은 가정은 현실세계와 경우에 따라 상당히 유리될 수 있으며 설명적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이러한 가정을 이론적으로 문제시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안보딜레마 이론을 적용하면서 찾아내는 정책적 처방이 비현실적이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안보딜레마 이론의 가정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만일 안보딜레마의 상황을 적용하려는 국가들이 경험적으로 완전한 주권국가가 아니라 정책결정이 동맹국에 의해서 심하게 제어될 수 있는, 말하자면 주권적으로 제약을 받는 국가라면 안보딜레마 상황이 적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국가가 순수하게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건 팽창적이고 공격적이라면, 또한 그 국가가 상대국가와 평화공존을 바라지 않고 있다면 위에서 말한 안보 딜레마 이론의 적용이 정확한 설명과 현실성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예컨대 한국과 미국사이에 안보 딜레마가 작용할 수 있을까? 무력병합이 지상의 목표라면 주권국가간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안보 딜레마가 작용할 수 있을까? 어떤 한 국가가 지구 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국가와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국가간에 안보딜

---

레마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는 전통적 현실주의자인 허츠(Herz)의 경우에도 국가가 애초부터 방어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허츠도 신현실주의와 마찬가지로 부정부상태라는 구조적 특성에서 안보딜레마 상황을 도출해 냈기 때문이다. John Herz, "Idealist Internationalism and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2, January, 1950, p. 157 참조.

21) 이러한 주권국가의 방어적인 성향은 최근 신현실주의의 국제협력이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Grieco와 같은 학자는 국가를 국제체제 내에서 위치 수세적 (defensive positional)이라고 개념화하였다.

레마가 작동할 수 있을까? 따라서 안보딜레마는 모든 국가간의 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이론이기보다는 관련국가간의 상호 정체성의 관계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맥락 의존적인(contextual)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의문들은 남북한 관계에 대하여 안보 딜레마 이론을 적용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찾는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남북한 관계는 완벽하게 주권적인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다. 두 국가는 “분단국가”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불완전한 근대민족국가이다. 북한의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고를 하는 우리의 정책결정자나 시민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탈북자의 보호문제나 북한의 인권문제, 이산가족의 문제, 헌법에 명시된 한국의 영토범위, 민족을 국가에 우선 시하는 행위와 의식들(이를테면 남북한 대표들이 모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는 예) 모두 한국의 “인”과 “뉘”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분단국가라는 정체성과 그에 기인하는 여러 종류의 통일운동과 아이디어들을 보면 두 국가는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치려는 내재적인 동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는 주권국가간의 권력중립적인 공존을 지향하고 있는 관계이기보다는 한쪽의 한쪽에 대한 무력통일 혹은 흡수통일의 위협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의 적화통일이라는 이념적 기반, 한국의 자본주의적 이념기반은 서로에게 군사적인 일면적인 위협보다 훨씬 근본적인 총체적인 위협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분단국가라는 정체성과 그 내부적 이념기반으로 인하여 한 쪽의 안보조치는 안보딜레마에서 말하는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인지적인 불확실성(cognitive uncertainty)에 의해서만 다른 쪽에 위협으로 전달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지적인 확실성(cognitive certainty)에 의해서 위협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단국가의 정체성만이 남북한간의 안보관계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이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행위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유엔에의 개별적 가입이나, 국제조약의 당사자로서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독자적인

외교관계의 수립 등이 그러한 예이다. 따라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은 남북한간의 정체성의 관계는 단순히 고정된 하나의 정체성의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주권국가의 정체성이, 또 때로는 서로 다른 이념적 기반을 가진 분단국가의 정체성이 발현되는 복수정체성(multiple identity)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안보딜레마적 상황으로 가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남북한 관계의 핵심적인 구도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삼국관계 역시 이론적으로 순수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상징하여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한-미 관계만을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한국과 미국간의 관계는 동맹과 우방이라는 정체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방어적 군비증강뿐만이 아니라 공격적 군비증강도 우리에게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더욱이 한미 관계의 군사, 안보정책의 독자성의 수준을 보게 되면 한국의 안보, 군사정책은 미국에 의해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작전통제권의 문제나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등의 예와 같이). 이들 국가간의 관계는 권력중립적인 주권국가라는 정체성의 관계이기보다는 권력관계가 결부된 불완전주권국가와 초국경적인 주권국가간의 관계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간에 엄밀한 의미에서 안보딜레마가 작동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안보딜레마라는 이론을 가지고 분석한 남북한 관계에 제시되는 처방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러한 처방은 한국이 제시하는 대북정책과 논리적으로 부합하는 것일까? 기존의 처방을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안보딜레마 이론에서 제시되는 처방은 인간의 본성을 더욱 강조하는 현실주의적인 처방으로서 억지력이라는 정책과 보다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제시되는 신뢰구축조치(CBM)라는 두 가지의 처방으로 크게 나눌 수

22) 불완전 주권국가와 초국경적 주권국가의 관계와 그 이론적 함의에 관해서는 Geun Lee, "Sovereignty, Identity, and Power Politics in Inter-State Policy Coordin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6을 참조.

있다. 자유주의와 현실주의가 메타이론적인 관점에서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여기서 각기 다른 처방이 같은 분석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나타난다. 상대방을 근원적으로 신뢰하기 힘들 것이라는 신념이 강한 정책결정자들은 억지력 증강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으며 반면 안보딜레마가 형성되는 조건인 인지적인 문제, 즉 불확실성의 문제만 해결되면 평화적인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는 정책결정자들은 신뢰구축조치에 더욱 무게를 둔다. 한편 구성주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복수의 정체성 중에서 우방의 정체성이 견고하고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와 보다 흡스의 세계에 가까운 주권국가간의 정체성이 언제라도 발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가 전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을 보게되면 교묘하게도 억지력과 신뢰구축의 두 가지 정책방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즉 억지력에 기반하면서 상호간에 신뢰를 증진시켜나간다는 것이 현 김대중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복수의 정체성에서 어느 정체성이 공고하게 지속될 것인가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히 현실적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신뢰구축과 평화공존을 현정부가 중기적인 정책목표로 삼고 있을 때 신뢰구축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남북간의 정체성의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한 중기목표 실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협의에서 신뢰구축조치라는 것은 안보딜레마를 일으키는 인지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작업과 동일시 될 수 있다. 핫라인의 설치라든가,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영공의 개방, 무기등록제도 등이 그 예인데 남북한에는 이러한 조치가 매우 포괄적으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한간에 이러한 인지적인 불확실성만을 제거하면 신뢰가 구축되는 것일가에 있다. 그러한 신뢰구축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간에 안보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지적인 불확실성에 있다는 공유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이는 이미 어느 정

도의 신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상호간에 분단국가의 정체성이 강하게 남아있고 또한 서로 다른 위협적인 이념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즉 서로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기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적인 불확실성을 군사안보 면에서만 해결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신뢰 구축조치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안보정책의 노출을 가져와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신뢰구축을 위한 첫 번째 조치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만일 신뢰구축조치만을 목표로 한다면 분단국가의 정체성을 깨는 것이 우선 중요하며 새롭게 구성되는 정체성이 서로에게 권력중립적인 주권국가의 정체성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이는 매우 원대하고 장기적이며 어려운 구상이지만 이론적으로 평화공존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여러 가지 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구성주의적으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의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주요 담론의 장에서 분단국가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통일”이라는 담론이 보다 서로간의 존재를 인정하는 담론인 “남북 화해협력”의 담론으로 담론의 텍스트를 대체해 가거나, 통일부의 명칭이 남북화해협력부로 바꾸고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를 유도하면서 가능해 질 것이다.<sup>23)</sup> 남쪽의 국가보안법 개정의 문제와 북한의 노동당 규약의 개정문제를 연계하는 것도 비슷한 실천의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이상적으로는 북한을 이미 분단 국가가 아닌 하나의 주권국가인 것과 같이 대우해 주는 “희망정체성의 실천” 전략(altercasting)을 사용할 수도 있다.<sup>24)</sup>

이러한 전략은 모두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전략들인데 그 경우 남북관계는 역지력에 의해 안보가 유지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

23) 이에 관하여는 Geun Lee “An Alternative Approach to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on the Korean Peninsula,” 1999년 8월 카나자와 심포지움 발표논문 참조.

24) Altercasting 전략에 관하여는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International Organization* (1992, Spring, Vol. 46, No. 2), pp. 391-425 참조

안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며 이는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이 결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신뢰구축조치는 국내정치와 국내적 담론의 변화에서 우선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이는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대한 안보적 연구는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관계와, 어떻게 특정한 정체성의 관계가 구축되고 그것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구성주의의 경험적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 2.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정체성 균형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이론과 동맹이론의 관점에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안보정책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과의 과거 식민지 경험과 제국주의적 침략의 경험은 한국에게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의 우려와 우경화, 망언 등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가까운 우방이며 경제관계나 실질적인 민간차원의 교류 등에서 보면 그 어떤 국가보다도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의 방위정책 상 적국도 아니며 아직 잠재적 적대국도 아니다. 또한 일본이 80년대 패권국의 위치를 넘보는 위치까지 부상하였고 소위 말하는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을 때에도 한국의 안보정책은 일본에 대하여 균형정책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주권국가간에 상대방의 안보정책에 관하여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얼마전의 식민지 국가인 일본에 대하여 한국은 왜 균형정책을 취하지 않을까? 우방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는 복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위협적인 존재로서 일본의 정체성이 발현될 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은 왜 이에 대한 대비가 없을까?

이에 대한 가장 현실주의적인 답은 한국과 일본이 소련에 대한 세력 혹은 위협균형(balance of threat)을 위하여 미국에 동승(bandwagoning)하여

같은 진영에서 균형을 취하게 되었고 따라서 같은 진영내에서 서로간의 협조관계가 증진되었다는 논리일 것이다. 하지만 불확실한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이 1980년대 패권국의 지위를 넘보던 일본에 대한, 그리고 잠재적인 위협국인 일본에 대한 안보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세력균형이론, 위협균형이론, 그리고 안보 딜레마의 이론에서 볼 때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sup>25)</sup>

구성주의적으로 본다면 한국과 일본은 우방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고 따라서 상호간에 균형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는 복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언제 흡수적인 현실주의적 국가의 정체성이 발현될 지 모르는 것이며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이에 항상 대비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다. 왜 한국은 독립 이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일본에 대하여 우방의 정체성이 그렇게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구성주의적인 가설을 하나 제시한다면 한국은 일본의 우방으로서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정체성의 발현을 차단하는 소위 말하는 “정체성의 봉쇄”(Identity Containment)와 “정체성의 균형”(Balance of Identity)이라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복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위협적인 정체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현이 되는 초기에 이에 대하여 기존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균형의 정책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아직 경험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일본의 망언과 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대응 패턴과 과정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정체성의 균형정책 혹은 정체성의 봉쇄정책이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25) 이러한 신현실주의적인 논리는 Waltz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Waltz, 앞의 책, pp. 70-71을 참조. 한편 일본에 대한 세력균형의 하나로 EU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관한 간략한 논의는 Joseph Grieco, “Realist International Theory and the Study of World Politics,” in Michael Doyle and John Ikenberry eds., *New Think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estview Press, 1997), p.185 참조.



수 있다. 1980년대 일본의 위치가 경제적인 초강대국의 위치에 오르면서 일본 내부에서 정체성의 변화를 피하는 움직임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 근대사에 대한 재해석을 동반하는 잦은 망언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통하여 표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그 연대는 놀라울 정도로 긴밀한 것이었다. 즉 망언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은 같은 진영에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 때 한국과 중국의 대응 내용인데 모두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경고이며 아직도 과거를 반성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비판이었다. 이러한 대응은 모두 일본 정부의 신속한 망언자의 사퇴조치로 일단락 지어지면서 예전의 관계로 복원되는 과정이 반복된다.<sup>26)</sup> 한국과 중국은 과거의 침략자적인 일본의 정체성이 다시 발현될 것에 대한 공동의 균형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과거사 문제에 대한 거론을 통하여 평시에도 일본의 위협적인 정체성의 발현에 봉쇄의 영향력을 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이 경험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이는 세력균형이론과 동맹이론에 이론적으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균형이라는 것이 힘의 분포나, 위협의 존재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의 균형관계는 같은 동맹의 진영 내에서도 미묘하게 작동하여 현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인간본성에 근거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에 대한 방어기제가 정체성의 봉쇄나 균형을 통하여 같은 우방 혹은 동맹국간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민주평화이론은 비록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동맹국간의 “정체성의 집단안보론”(collective identity security)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면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만남이 더욱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26) 이에 관하여는 이원덕,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하영선 편, 한국과 일본 (나남출판, 1997); Hidenori Ijiri, “Sino-Japanese Controversy since the 1972 Diplomatic Normalization,” in Christopher Howe ed., *China and Japan* (Clarendon Press, 1996) 참조.

### 3. 지역간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안보공동체의 가능성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의 형성은 공동체구성원의 집합적 정체성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sup>27)</sup> 유럽의 경우와 대서양지역에서의 안보공동체 논의가 활발한 것은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공동가치를 가진 국가간의 집합적 정체성이 어느 정도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러(Adler)가 말하는 공동인식지역(cognitive region)도 국가가 같은 지역에 있다는 공통의 집합적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안보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sup>28)</sup>

동아시아와 동북아에 있어서도 안보공동체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분위기인데 대부분의 경우 동북아에서의 안보공동체가 가능하다면 이는 먼 훗날의 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먼 훗날에라도 가능할 것인가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에 집합적 정체성이 생겨날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논하지 않고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를 논하는 것은 매우 허탈한 일이다. 그런데 한가지 동아시아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최근 매우 흥미로운 구성주의적 가능성이 발견되고 있다. 그것은 지역간 협력의 과정 상 필요에 의하여 국가들이 의식적으로 집합적 정체성을 담론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ASEM이나 EALAF, FTAA 등과 같은 지역간 협력은 이론적으로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즉 사실상 국가가 협력의 주체이지만 특정 지역의 국가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가정하고 협력을 해나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이 협

27) 이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는 Emanuel Adler and Michael Barnett eds., *Security Commun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참조.

28) 공동인식지역에 관하여는 Adler, Emmanuel, 1997. Imagined (Security) Communities: Cognitive Reg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Vol 26, No.2를 참조

력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협력의 과정이다. 따라서 지역간 협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상호간에 다른 지역(저 지역과 이 지역)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각각의 지역의 공동인식지역화를 가능하게 하고 또 공고히 할 수 있다. 한편 타 지역에 비하여 공동인식지역화가 떨어지는 지역은 지역내의 집합적 정체성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들의 의도적 공동체 형성노력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즉 국가적 대응에서 지역적 대응으로 정체성의 수준이 공간적으로 한 차원 올라가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다.

최근 동아시아 공동체의 모색이나 ASEAN+3, 동북아 삼국간의 협력체 구상 등은 이러한 지역간 협력과 지역적 차별성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의도적인 “지역”의 공감대 형성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과정이 단순히 가까이 있는 국가간의 편의적 연대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집합적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지역간 협력과 대응이라는 과정의 반복 속에서 집합적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반 하에서 동아시아의 안보공동체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V. 맺는말

이 글은 신현실주의에 의해 주도되어 온 국가안보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새로이 등장하여 발전해 온 구성주의가 어떠한 이론적, 현실적 보완을 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현실주의와 구성주의의 차이점과 보완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구성주의는 국제정치 일반이론으로서 발전되어 독자적인 이론적, 개념적 기반을 제시하여 왔으며, 이는 안보론과 같은 중범위이론에서도 기존의 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는 분석력을 보여주고 있다. 신현실주의와 구성주의, 그리고 구성주의와 고전적 현실주의의 접점에

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주의가 현실주의 전통과 반드시 대립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고전적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국제정치의 권력현상에 대한 분석과 양립가능한 메타이론적, 이론적, 경험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성주의와 현실주의의 이론적 장점을 결합한 안보론의 논의는 한국의 안보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보여진다. 우선 남북간 안보딜레마의 독특한 성격,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구성주의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한국이 동북아에서 당면하고 있는 세력균형의 문제를 물리적 힘의 균형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정체성의 균형의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더 나아가 지역 내 제도적 협력과 국제제도간 협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구성주의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시켜, 경험적 연구에 도움이 되는 구성주의 안보론의 개념들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국의 상황에 맞는 경험적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구성주의 개념들을 현실 속에서 정확히 파악할 인식론과 방법론을 개발하여, 실제 현실 속에서 국가 정체성과 상호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 지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